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임태준 연구위원, 홍민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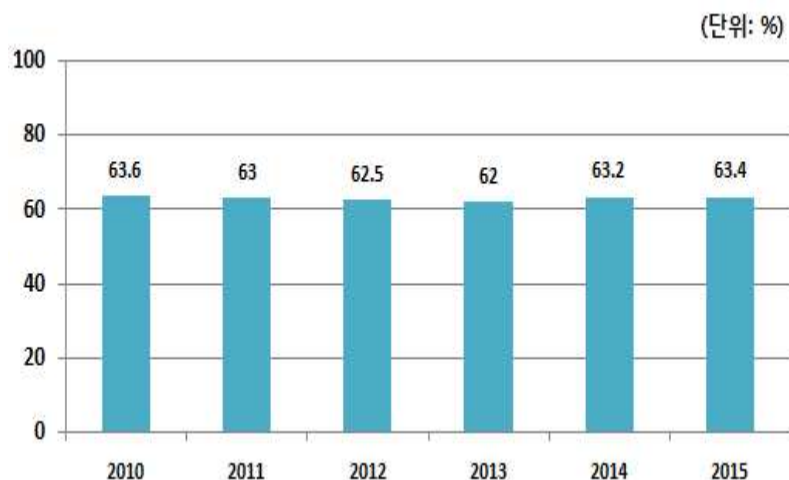
- 최근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상황
-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 총저축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장률 70%안)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지지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보험 보장률 70%안이 실행되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즉시 10.8% 증가하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53.7% 높은 수준에 도달함
 - 둘째,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 60년 후의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6.6%p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셋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증가로 총자본은 약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넷째, 노동공급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 예측되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인구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다섯째,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나,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여섯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에 기인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연구배경



- 지난 8월 9일,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함¹⁾
-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급여 항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임
- 2005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한 바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²⁾

〈그림 1〉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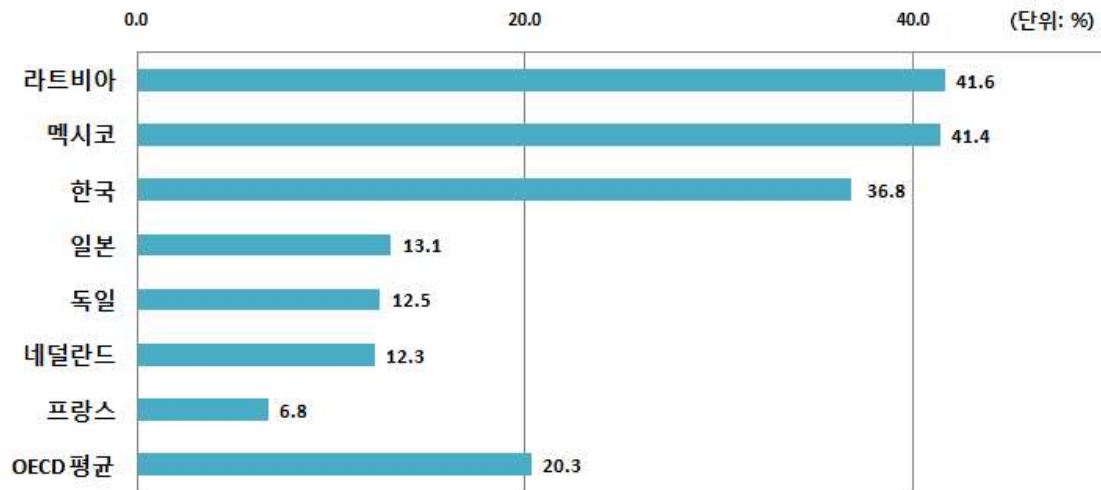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7)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국가 평균(20.3%) 대비 약 1.8배이며, OECD 국가 중 라트비아(41.6%),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1) 보건복지부(2017. 8. 9),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 보장률은 건강보험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 보험자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진료비-본인 부담(비급여+법정)/전체 진료비)로 산출함

〈그림 2〉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2015년 기준)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17)

■ 이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며 비용과 효과가 낮은 항목은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편입하여 관리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
-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생 차단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및 방법



■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평가됨

- 첫째, 과부담 의료비는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를 야기하며 개인파산의 주된 원인이 됨³⁾
 - 높은 의료비 혹은 재난성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⁴⁾
- 둘째, 국민의료비의 높은 가계 직접부담률은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킴
 - 이로 인한 개인 건강상태 악화는 노동생산성 하락을 야기하여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⁵⁾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함
 -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둘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 총저축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³⁾ Domowitz, I. and Sartain, R. L.(1999), “Determinants of the Consumer Bankruptcy Decision”, *The Journal of Finance*, 54(1); Himmelstein, D. U., Thorne, D., Warren, E., and Woolhandler, S.(2009), “Medical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2007: Results of a National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22(8)

⁴⁾ Gross, T. and Notowidigdo, M. J.(2011), “Health Insurance and the Consumer Bankruptcy Decision: Evidence from Expansions of Medicai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

⁵⁾ Bloom, D. and Canning, D.(2003), “The Health and Poverty of Nations: from Theory to Practic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4(1); Bloom, D. E., Canning, D., and Sevilla, J.(2004), “The Effect of Health on Economic Growth: a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World Development* 32(1); Bhargava, A., Jamison, D. T., Lau, L. J., and Murray, C. J.(2001), “Modeling the Effects of Health on Economic Grow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3)

- 단, 단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증가로 국내 총저축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 본고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의 정책지지도를 정량화하여 객관적 정책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는 Lim(201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분석에 활용된 동태확률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⁶⁾
 - 첫째, 가계 의료비지출의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을 현실적으로 추정함⁷⁾
 - 둘째, 가계는 자신의 평생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 저축, 소비수준을 결정함
 - 셋째, 건강보험 강화 정책 분석에 인구고령화를 고려하기 위해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을 활용함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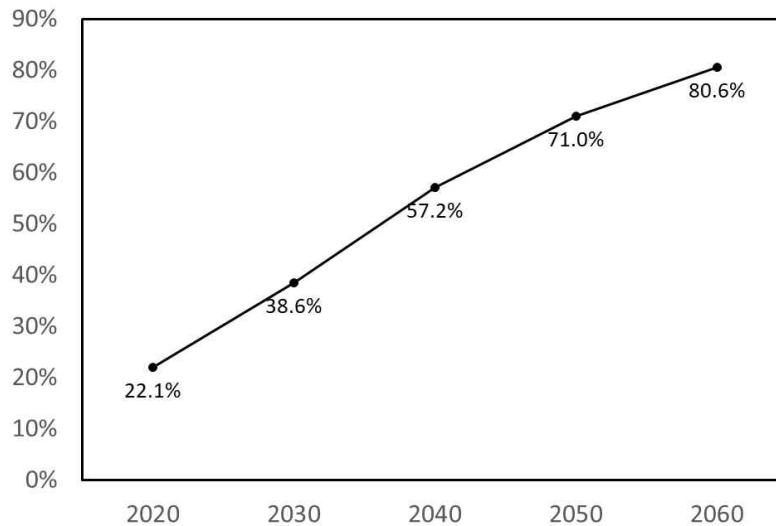
■ 본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장률 70%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 균형 재정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제시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중대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본고에서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교를 통해 인구고령화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분석의 경우,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가 <그림 3>과 같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함

⁶⁾ Lim, Taejun(2017), "Macroeconomic Effects of Expansion of Universal Health Care: The Case of South Kore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58(2)

⁷⁾ 가계 의료비지출의 확률과정이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ve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함

〈그림 3〉 노년부양비 예측치: 2020~2060



자료: 통계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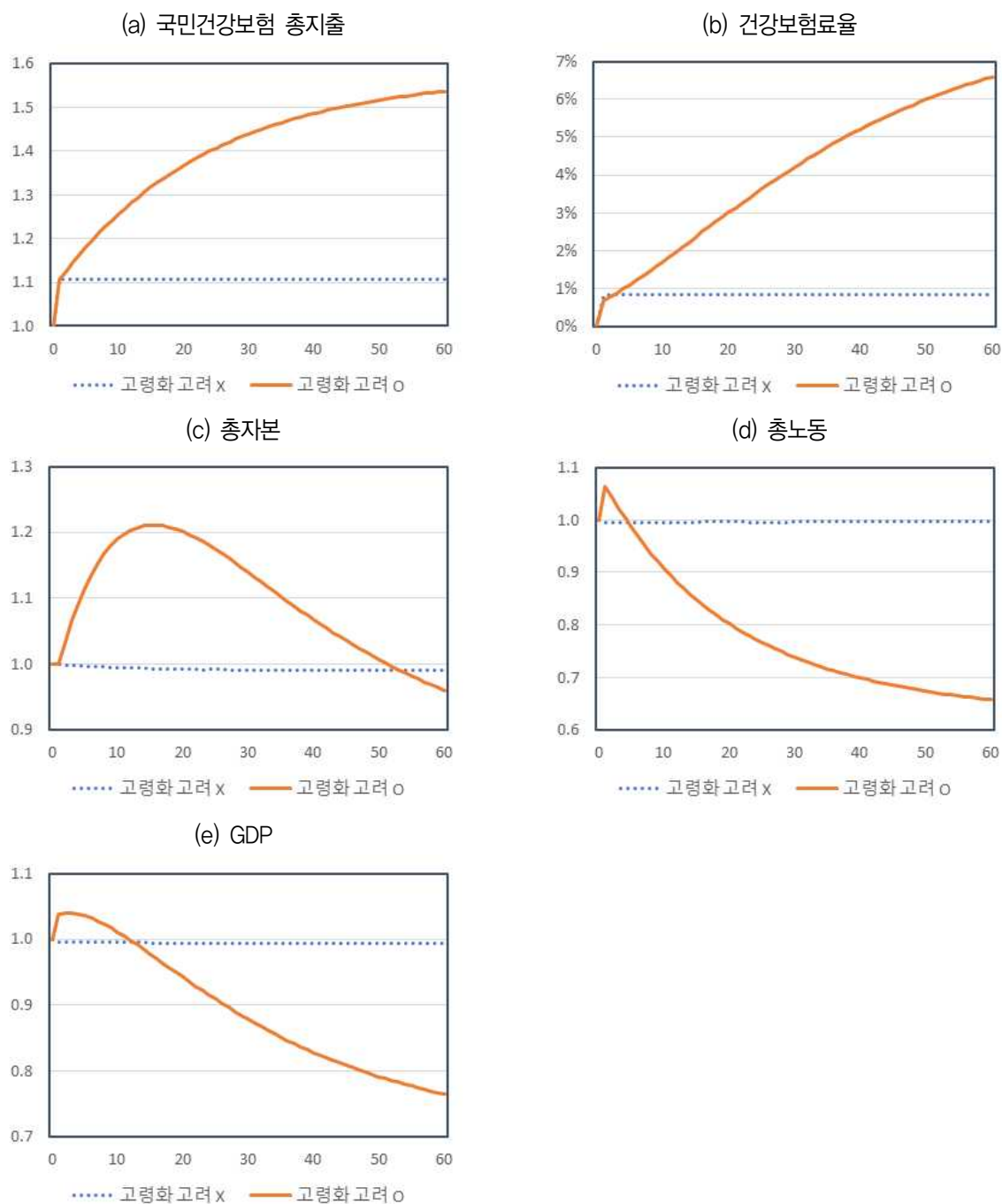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장률 70%안)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4〉 참조)⁸⁾

- 첫째,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보장률 70%안 실행 즉시 10.8% 증가하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30(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43.9(53.7)% 높아짐⁹⁾
- 둘째,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를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30(60)년 후의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4.2(6.6)%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셋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확대로 총자본은 약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거나(현재 대비 21% 증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총자본의 증가세는 둔화됨
- 넷째, 총노동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 예측되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총노동의 오버슈팅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유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 공급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다섯째,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2년이 경과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⁸⁾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보장률 인상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고령화를 고려하였을 시의 결과에 대해서만 서술하였음

⁹⁾ 〈그림 4〉 각 항목의 구체적 수치는 별점을 참조할 것

〈그림 4〉 주요 거시변수 변화 추이: 보장률 70%안 실행 시



- 주: 1) 〈그림 4〉는 Lim(2017)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계산한 결과를 요약함
 2) 가로축은 시간(단위: 1년)을 표시하며 시점 1에 보장률 70%안이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
 3) 〈그림 4〉(a)~(e)는 시점 0 대비 각 항목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며 시점 0(정책 시행 직전의 상태)을 기준으로 평준화함. 예를 들어, 시점 10에 1.1의 수치를 나타낸다면 시점 0 대비 10년간 10% 인상되었음을 의미함(단, 건강보험료율의 경우는 시점 0 대비 인상폭을 퍼센트 포인트(%p)로 나타냄)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모의찬반투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에서 발생되는데, 모형에 근거한 모의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률 인상안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고령화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중 0.7%만이 보장률 인상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비근로자 및 고령인구는 만장일치로 보장률 인상안에 찬성하였음
- 고령화 효과를 감안한 경우, 인구 전체가 만장일치로 보장률 인상안에 찬성하였음

〈표 1〉 보장률 70%안에 대한 모의찬반투표 결과

(단위: %)

대상	고령화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	고령화 효과를 감안한 경우
전체 인구	99.6	100.0
생산가능인구(15~64세)	99.5	100.0
- 근로자	99.3	100.0
- 비근로자	100.0	100.0
고령인구(65세 이상)	100.0	100.0

자료: Lim(2017)

- 보장률 인상안에 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책지지율은 의료비 지출 감소 및 가처분 소득(의료비 지출 차감 후)의 변동성 하락으로 증가하는 효용 증가분이 보험료를 인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유인 왜곡과 경제적 비효율을 압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고의 모의찬반투표 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개별 가계의 평생기대효용에 근거함

■ 단, 본고의 모의찬반투표 결과는 가계의 정치적 성향 및 국정지지도 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와 초고소득

¹⁰⁾ 2008년 10월 건강연대는 전국 만 10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민의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음(모의찬반투표 실행방법은 Lim(2017)을 참조할 것)

총 가계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낮아질 수 있음
 - 이는 인구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현 세대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으로 지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임 **kiri**

〈별첨〉

〈별첨 표 1〉 주요 거시변수 변화 추이: 보장률 70%안 실행 시

연 도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보험료율	총자본	총노동	GDP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보험료율	총자본	총노동	GDP
0	1,000	0.00%	1,000	1,000	1,000	1,000	0.00%	1,000	1,000	1,000
1	1,108	0.83%	0.999	0.994	0.996	1,108	0.70%	1,000	1,063	1,038
2	1,108	0.83%	0.998	0.995	0.996	1,127	0.79%	1,034	1,043	1,039
3	1,108	0.83%	0.998	0.995	0.996	1,146	0.89%	1,065	1,023	1,039
4	1,108	0.83%	0.997	0.995	0.996	1,164	1.00%	1,092	1,004	1,038
5	1,108	0.83%	0.997	0.995	0.996	1,181	1.11%	1,116	0.985	1,036
6	1,108	0.84%	0.996	0.996	0.996	1,197	1.22%	1,136	0.968	1,032
7	1,108	0.84%	0.996	0.995	0.996	1,213	1.34%	1,154	0.951	1,028
8	1,108	0.84%	0.995	0.996	0.995	1,228	1.46%	1,169	0.936	1,023
9	1,108	0.84%	0.995	0.996	0.995	1,243	1.59%	1,181	0.921	1,017
10	1,108	0.84%	0.994	0.996	0.995	1,257	1.72%	1,190	0.907	1,011
11	1,108	0.84%	0.994	0.996	0.995	1,270	1.85%	1,198	0.894	1,005
12	1,108	0.84%	0.994	0.996	0.995	1,283	1.98%	1,203	0.881	0.998
13	1,108	0.84%	0.994	0.996	0.995	1,295	2.10%	1,207	0.870	0.992
14	1,108	0.84%	0.993	0.996	0.995	1,307	2.24%	1,210	0.858	0.984
15	1,108	0.84%	0.993	0.996	0.995	1,318	2.37%	1,211	0.847	0.977
16	1,108	0.84%	0.993	0.996	0.995	1,328	2.50%	1,211	0.837	0.970
17	1,108	0.84%	0.993	0.996	0.995	1,339	2.63%	1,210	0.828	0.964
18	1,108	0.84%	0.992	0.996	0.995	1,349	2.76%	1,207	0.818	0.956
19	1,108	0.85%	0.992	0.996	0.995	1,358	2.89%	1,205	0.810	0.949
20	1,108	0.85%	0.992	0.996	0.995	1,367	3.01%	1,201	0.802	0.943
21	1,108	0.85%	0.992	0.996	0.995	1,376	3.14%	1,197	0.794	0.936
22	1,108	0.85%	0.992	0.996	0.995	1,384	3.27%	1,192	0.786	0.929
23	1,108	0.85%	0.991	0.996	0.994	1,392	3.39%	1,186	0.779	0.922
24	1,108	0.85%	0.992	0.996	0.994	1,400	3.51%	1,180	0.773	0.915
25	1,108	0.85%	0.991	0.996	0.994	1,407	3.63%	1,174	0.766	0.909
26	1,108	0.85%	0.991	0.996	0.994	1,414	3.75%	1,167	0.761	0.903
27	1,108	0.85%	0.991	0.996	0.994	1,421	3.87%	1,161	0.754	0.896
28	1,108	0.85%	0.991	0.996	0.994	1,427	3.99%	1,154	0.749	0.890
29	1,108	0.85%	0.991	0.996	0.994	1,433	4.10%	1,147	0.738	0.884
30	1,108	0.85%	0.991	0.996	0.994	1,439	4.21%	1,139	0.734	0.878

주: 연도 1에 보장률 70%안이 실행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별첨 표 1〉의 각 항목은 연도 0(2015년 기준) 대비 변화추이를 나타냄.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연도 10에 1.1의 수치를 나타낸다면 그 항목은 연도 0 대비 10년간 10% 인상되었음을 의미함(단, 건강보
험료율의 경우는 연도 0 대비 인상폭을 퍼센트 포인트(%p)로 나타냄)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례

임태준 연구위원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Chen et al.(2017)은 중국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음. 중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불평등의 연령 증가에 따른 악화정도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비해 심하지 않았음. 또한 저자들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부족, 국민의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는 더 이상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음

- UN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5년 11억 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전망
- 중국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는 1960년 15%에서 2015년 3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남미의 노년부양비는 14%에서 27%로 상승하였음

■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두 시각이 존재함

- 첫째, Deaton and Paxson(1994)은 대만, 중국, 영국, 미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악화됨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인구 전체의 평균 연령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악화를 야기함
 - Gruber and Wise(2001)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노년층에 배분되는 공적자원의 비율이 하락하였음을 시사함

– Razin et al.(2002)은 이로 인해 노년층 대상 공적 이전(social transfer)이 축소되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둘째, Higgins and Williamson(2002)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을 습득한 계층에 유리한 보상체계(skill premium)에 주목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술숙련도 편차의 감소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Preston(1984)은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노년층 대상 공적 이전비(public transfer)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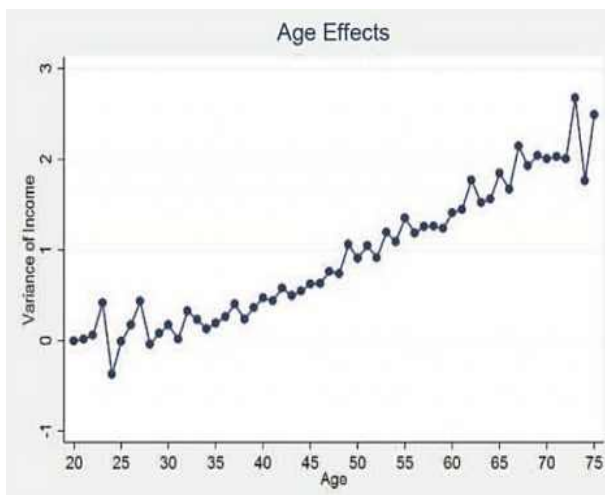
– Bussolo et al.(2015)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자본소득 대비 임금수준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고령화 속도의 차이로 인구고령화를 다룬 학술연구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Chen et al.(2017)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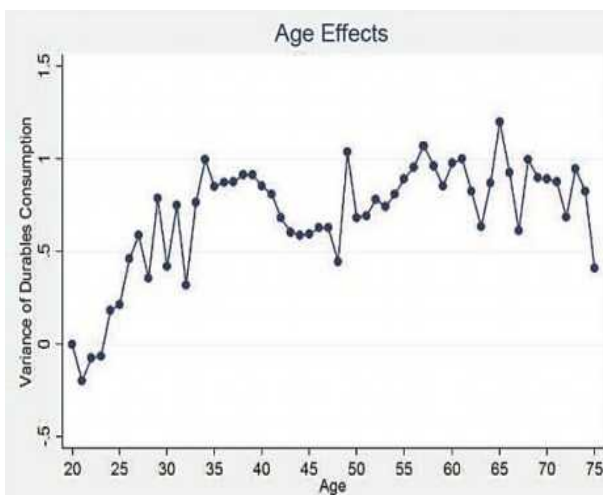
● 첫째,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됨(〈그림 1〉 (a) 참조)

〈그림 1〉 연령에 따른 소득 및 소비불평등 정도

(a) 소득불평등



(b) 소비불평등



- 둘째, 소비불평등은 청년층에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일부 구간이 존재할 뿐 35세 이후로는 특별히 악화되지 않음(〈그림 1〉 (b) 참조)
 - 단, Chen et al.(2017)에서 활용된 데이터(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는 비소비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셋째, 금융시장의 발달은 인구고령화가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소비불평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그림 1〉에서 확인되는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음
 - 즉,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는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음

참고문헌



- Bussolo, M., J. Koettl, and E. Sinnott(2015), “Golden Aging: Prospects for Healthy, Active, and Prosperous Aging in Europe and Central Asia”, World Bank
- Chen, X., B. Huang, and S. Li(2017), “Population Aging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Deaton, A., and C. Paxson(1994),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3), pp. 437~467
- Gruber, J., and D.A. Wise(2001),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olicies for an Aging Society”,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iggins, M., and J.G. Williamson(2002), “Explaining Inequality the World Round: Cohort Size, Kuznets Curves, and Openness”, *Southeast Asian Studies*, 40(3), pp. 268~302
- Preston, S.H.(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 21(4), pp. 435~457
- Razin, A., E. Sadka, and P. Swagel(2002),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4), pp. 900~918



세계 보험산업 현황 및 전망¹⁾

채원영 연구원

2017년 세계 손해보험시장은 미국, 서유럽의 자동차보험 요율 상승 등으로 3.0% 성장할 전망이나 북미 및 멕시코 지역의 대재해 손실로 수익성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 생명보험시장은 중국 생명보험시장 성장 가속화로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은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2018~2019년 세계 손해보험시장은 2017년 발생한 대재해에 따른 요율 인상 등으로 성장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로 수익성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신흥시장의 인구증가, 도시화, 중산층 확대 등으로 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허리케인 등 대재해 손실 및 기업성 보험의 가격 조정 등으로 수익성은 하락함

- 2017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미국, 서유럽의 자동차보험 요율 상승 등으로 2016년 2.3%보다 0.7%p 상승한 3.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17년 주요 8개국²⁾ 손해보험 ROE는 대재해 손실 및 선진국시장³⁾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3%p 하락한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하반기에 발생한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와 멕시코 지진에 따른 보험 손실(insured loss)은 95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됨⁴⁾
 - 또한 미국과 유럽 지역 자동차보험 사고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 밖에도 2013년 1/4분기~2017년 2/4분기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기업성 보험의 갱신 요율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음⁵⁾

1) Swiss Re(2017, 11), "Global Insurance Review 2016 and Outlook 2018/19"를 발췌, 요약함

2)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3) 북미, 서유럽(터키 제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4) 이 밖에 남유럽 및 캘리포니아 대화재, 호주 싸이클론 Debbie 등이 있음

5) Marsh, "Global insurance market index, Q2 2017", 그러나 최근 요율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음

■ 2017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중국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가속화로 전년 대비 1.0% 상승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말 세계 생명보험산업 ROE는 8.1%로 2015년 10.8%, 위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4.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수익률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회사는 위험자산 중심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고 있음
 - 그러나 Solvency II 시행으로 유럽 보험회사의 70% 이상이 투자자산 중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이미 증가된 리스크 수용범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⁶⁾
- 또한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수익성 향상을 위해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2018~2019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대재해 손실에 따른 요율 상승 등으로 2% 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금리 상승 추세로 수익성도 회복될 전망임

- 2018~2019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대재해 관련 보험 요율 인상, 세계 경기 회복세 및 새로운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손해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
 - 2017년 북미, 호주, 멕시코 등에서 발생한 대재해 손실에 따른 관련 보험 요율 상승이 예상됨
 -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이버위험, 제품 회수 및 평판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 보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확대될 전망임
-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은 금리 상승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며 대재해 손실이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계 손해보험 ROE는 7~8%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18~2019년 세계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신흥시장의 인구증가, 도시화, 중산층 확대 등으로 4%를 유지할 전망임

- 2018~2019년 신흥국시장⁷⁾의 생명보험시장 성장률은 약 10%를 유지할 전망이며 선진국시장의 경우 1~2%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kiri**

6)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2017, 4), "A Reversal in Expectations", 2017 GSAM Insurance Asset Management Survey

7) 남미, 중앙유럽,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이스라엘 제외), 터키, 아프리카



미국의 Z세대와 금융산업

박정희 선임연구원

미국의 금융산업은 포스트 밀레니엄세대인 Z세대가 5년 내에 거대 소비집단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주목함. Z세대는 완전한 디지털 세대로서 이전 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빠르며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 시각적인 자료에 익숙한 것이 특징임. Z세대는 학자금대출이나 일자리 찾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교내 토론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보험회사는 Z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금융산업은 포스트 밀레니엄세대인 Z세대가 5년 내에 거대 소비집단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주목함¹⁾

- Z세대는 2000년 이후 출생한 7,400만 명의 청소년 집단으로 이는 미국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세대임
- 이에 Z세대의 금융서비스 이용 목표나 고려사항, 행동패턴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Z세대는 성인이 될수록 금융지식과 행동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어린시절 형성된 금융습관이 향후 노동인구로 유입 시 Z세대의 금융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Z세대는 완전한 디지털(digital native)²⁾ 세대로서 이전 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일방적인 텍스트 형식보다는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 시각적인 자료에 익숙한 것이 특징임

- 이 세대는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 세대로 미디어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가족 및 친구와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또한 Z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금융위기 등과 같은 불안감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전 세대

1) LIMRA(2017), "Discovering Gen Z : Inside their financial world"

2)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익숙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에 능숙한 세대임

보다는 소비와 투자에 신중한 편임

- Z세대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X세대 부모이기 때문에 Z세대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소득손실과 해고 등을 간접적이거나 경험함

■ 설문조사 결과,³⁾ Z세대는 학자금대출이나 일자리 찾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교내 토론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Z세대 10명 중 9명이 일정기간 내 대학졸업을,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자립, 취업 또는 본인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이들은 학자금대출이나 취업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고민이 밀레니엄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Z세대는 학자금상환 방법과 저축, 자동차 보험, 투자지식 등 다양한 금융주제에 관심을 보임
 - 졸업을 앞둔 Z세대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 상환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저축이나 예산 등을 포함한 자금관리 방법을 학습하기를 원함
-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거나 교내 토론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보험회사는 Z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금융교육 관련 콘텐츠는 Z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교실에서 전문가와 직접대면을 비롯한 스카이프 방식의 토론, Youtube 비디오 클립, 금융회사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
- 현재의 교육자료가 Z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kiri](#)

3) 조사대상은 Z세대를 16~17세로, 밀레니엄세대를 18~22세로 한정하여 2,000명을 대상으로 함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소양 연구원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국내 지표		2016년 말	2017.12.7(목)	2017.12.14(목)	전주대비
금리	CD금리(91일)	1.52%	1.66%	1.66%	0.00%p
	국고채(3년)	1.64%	2.09%	2.08%	-0.01%p
	회사채(3년, AA-)	2.13%	2.65%	2.63%	-0.02%p
환율	원/달러	1,208.50	1,091.90	1,091.90	0.0%
	원/엔(100엔)	1,036.81	972.74	968.90	-0.4%
	원/유로	1,267.60	1,288.82	1,291.23	0.2%
	원/위안	173.26	164.88	164.87	0.0%
주가	KOSPI	2,026.46	2,461.98	2,469.48	0.3%
	KOSDAQ	631.44	753.46	770.35	2.2%
	KOSPI 보험지수	18,792.40	21,143.71	21,027.40	-0.6%

* KOSPI 보험지수는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3개(손해보험 8사, 생명보험 5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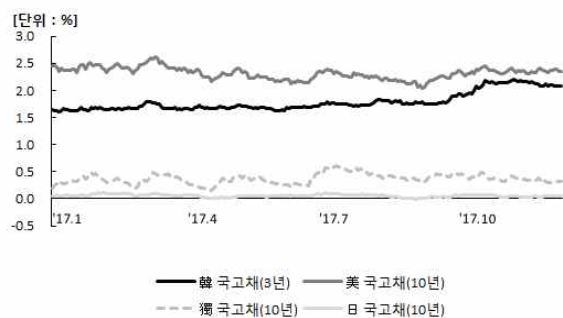
■ 해외 주요 경제지표

해외 지표		2016년 말	2017.12.7(목)	2017.12.14(목)	전주대비
금리	LIBOR(3개월, US\$)	1.00%	1.54%	1.59%	0.05%p
	미국 국고채(10년)	2.44%	2.36%	2.35%	-0.01%p
	독일 국고채(10년)	0.21%	0.29%	0.32%	0.03%p
	일본 국고채(10년)	0.05%	0.06%	0.05%	-0.01%p
환율	엔/달러	116.56	112.25	112.70	0.4%
	달러/유로	1.05	1.18	1.18	0.2%
주가	미국 DowJones	19,762.60	24,211.48	24,508.66	1.2%
	미국 Nasdaq	5,383.12	6,812.84	6,856.53	0.6%
	영국 FTSE100	7,142.83	7,320.75	7,448.12	1.7%
	독일 DAX30	11,481.06	13,045.15	13,068.08	0.2%
	프랑스 CAC40	4,862.31	5,383.86	5,357.14	-0.5%
	일본 Nikkei225	19,114.37	22,498.03	22,694.45	0.9%
	중국 상해종합	3,103.64	3,272.05	3,292.44	0.6%
	대만 가권	9,253.50	10,355.76	10,538.01	1.8%
	홍콩 항셱	22,000.56	28,303.19	29,166.38	3.0%
	DowJones 보험지수	262.60	315.01	315.53	0.2%
실물지표	두바이유(US\$/배럴)	53.99	59.45	59.99	0.9%
	금(NYMEX)(US\$/온스)	1,152.27	1,247.28	1,252.93	0.5%

* DowJones 보험지수(DJTINN)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회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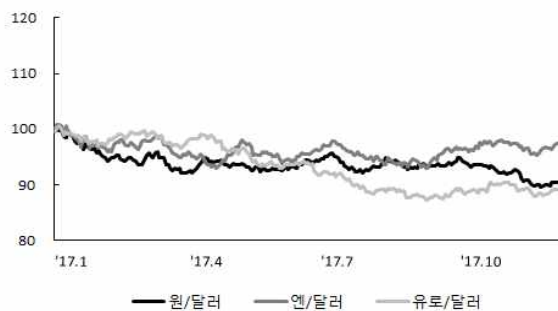
주요지표 비교차트

〈그림 1〉 주요국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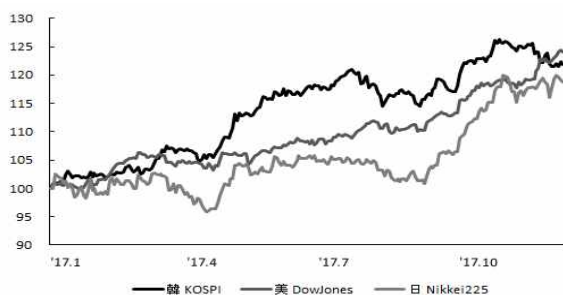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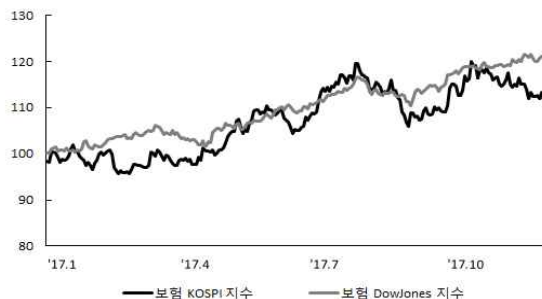
주: 2016년 12월 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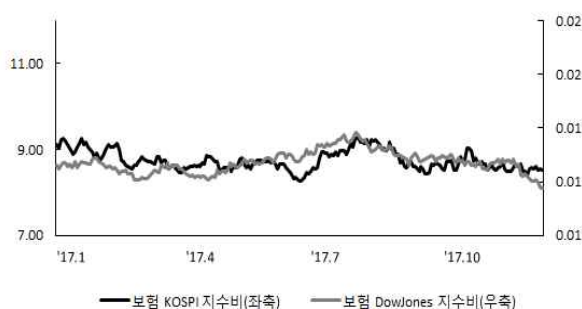
주: 2016년 12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4〉 한국, 미국 보험주가지수 추이



주: 2016년 12월 말 보험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5〉 한국, 미국 보험주가지수비 추이



주: 보험주가지수비=보험주가지수/주가지수로 계산함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6〉 국제유가,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